

보도시점 2026. 6. 17.(수) 14:00 (2026. 6. 18.(목) 조간)

##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 현장에서 길을 찾는다

- 고용노동부 장관,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영훈 노동부장관 주재로 사업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거나, 노무담당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거나, 또는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토로한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과 동행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소개되었다.

먼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지난해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24」(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와의 연계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밤늦은 시간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더 지능적인 AI로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사항을 자동진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교육도 진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거점별로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신청: <https://www.keli.kr/cmmn/index.do>)에 더하여,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는 음식점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노무교육도 추진한다(On·Off교육 병행, 의무위생교육 등 활용). 더 많은 사업장이 노동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식약처,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 등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

‘노무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올해부터 방문 횟수 증가, 1회→3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에 우선 선정하여,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정부가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일할 사람 채용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신고기간 운영도 검토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식과 환경도 함께 바뀌 나간다. 상반기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는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의심 사업장 점검을 지속 진행한다. 먼저, 최근 ‘가짜 3.3’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적극 돕고, 의도적인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가짜 3.3’ 계약: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사 상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붙임 2. 소규모 사업장 상생 관련 지원제도 안내

붙임 3. 장관 인사말씀

붙임 4. 가짜 3.3 관련 카드뉴스

담당 부서	<총괄>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유나 (044-202-7526)
		담당자	서기관	이재인 (044-202-7544)
	<AI노동법상담> 정책기획관 고용노동인공지능기획TF	책임자	팀 장	조경옥 (044-202-7830)
		담당자	사무관	임재진 (044-202-7748)
	<노무교육>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2-7587)
		담당자	사무관	송명찬 (044-202-7591)
	<자율개선 지원>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821)
		담당자	사무관	강명주 (044-202-7829)
	<고용보험>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책임자	과 장	이영기 (044-202-7368)
		담당자	사무관	박채원 (044-202-7909)
	<사업장감독>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553)
		담당자	서기관	박종길 (044-202-7528)
	<HR플랫폼 지원>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740)
		담당자	사무관	허 윤 (044-202-7836)

## 붙임1

## 간담회 개요

❖ 소규모 사업장의 상생을 위한 정부 지원,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방안 등 관련 현장의 의견 청취 및 향후 방향 모색

□ 일시 : '26. 6. 17.(수) 14:00~15:00

□ 장소 : 중소기업 DMC타워 3층 중회의실1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 참석자 (가나다순)

구분		성명
사업주 단체	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메이크업미용사회	금지선 회장
	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
		조광수 상임부회장
	편의점가맹점협의회	성인제 공동대표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
전문가	소공인진흥협회	엄천섭 부회장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호 부소장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4 4'	• 개회 / 사진촬영	전원
14:04~14:08 4'	• 인사 말씀	고용노동부 장관
14:08~14:18 10'	• 소규모 사업장 상생 관련 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14:18~14:58 40'	• 현장의견 청취	전원
14:58~15:00 2'	• 마무리 말씀 / 폐회	장관

\* 보도자료 배포 및 인사말씀 공개

## 1. 근로조건 준수 등 노무관리 지원

### 현장의 목소리

- ▶ “최근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노동법 준수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잘 안 옵니다. 노동법 상식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 ▶ “노동법 준수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비싼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그때그때 노동법 지식을 검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얼굴 보고 대화하면 마음 편히 못 물어볼 것도 AI에게는 여러번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좋구요.”

- (AI 상담) 소상공인이 영업 이후 밤늦은 시간에도 시공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제공, 노무리스크 관리 지원(‘25~)

### AI 노동법 상담

- ☞ 기존의 평일·주간 위주 유선 상담, 또는 비용 부담이 큰 외부 전문가 의존 방식 →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공인노무사회와 협업)를 마친 **노동법 전문지식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 「당근마켓」(민간앱) 탑재(‘25.下), 「소상공인24」(소상공인지원사업플랫폼)와 연계(중기부 협업)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 영세 사업장 자율점검 등 기능 확대(‘26.下)

###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 ☞ ①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업로드 시 AI가 위반 사항 자동진단, 개선안 제시, ②사업장 내부 사진 업로드 시 산업재해 위험요소 식별, 맞춤형 예방 패키지(체크리스트, 교육영상 등) 제공

- **(노무교육)**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진행 + 예비청년을 대상으로 노동권 교육과 함께,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 교육 지원

#### 소규모사업장 노동교육

- ☞ 전국 지역단위별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사례 중심 교육 진행('25년 9,400명)
- ※ 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keli.kr/cmmn/index.do>)에서 신청 가능

#### 청소년 노동권 인식 교육

- ☞ 예비청년에 대한 기본적 노동권교육 +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 교육 병행 (취업준비·알바를 위한 노동법, 직업인에게 필요한 책임감 등) ('25년 11.1만명)

- 청년 노동자 다수 업종(음식업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식품위생 교육기관\* 등과 협업하여 교육경로 다변화 → 맞춤형 노무교육 (On·Off 병행, 의무위생교육 등 활용) 추진

\* 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 11개소

- **(자율개선 지원)** 전담 인사·노무인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및 노무관리 관련 컨설팅 진행, 사업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서식·자료 등 제공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 '25년 사업장당 1회만 방문 → '26년부터 기초점검(1회)+후속점검(최대2회) 포함 총 3회까지 방문, 심층 컨설팅 제공 후 즉시 활용 가능한 사업장 표준 서식·규정 등(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조직문화 관련 절차 등) 제공

-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의 요청 시 컨설팅 대상 추가 배분('26.8월 이후) 예비 사업장에 우선 선정

-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HR플랫폼 이용료 지원(연 최대 180만원)

#### HR플랫폼 이용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신청 시 13개 HR플랫폼(출퇴근 기록 작성, 자동 급여정산,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스마트폰, PC를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이용료 지원('25~)

- **(인사노무 사례집)**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 중심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 배포·안내(공인노무사회 협업) <중기부>

※ 노무분쟁 상담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1599-0209, 노무 전담 변호사 상담 및 대리인 선임 지원)도 운영

## 2. 사회보험료 등 비용부담 완화

#### 현장의 목소리

- ▶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늘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아 현장에서는 생존 자체를 고민하는 실정입니다."
- ▶ "폐업의 공포 앞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과 같은 실질적인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사업주·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최대 3년 지원 ('25년 9,079억 → '26년 9,409억원)

- **(경영안정 바우처)**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26년 신설) <중기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 '25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제공(사용처: 4대 보험료, 공과금, 차량연료비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 및 폐업 시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중기부>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80%, 최대 5년 지원('25년 148억 → '26년 153억원)

### 3. 현장 관행 개선 여건 조성

#### 현장의 목소리

- ▶ "요즘은 근로형태도 다양하고, 잠깐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때그때 이 분들이 사회보험 가입대상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 ▶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근로계약서 대신 관행적으로 전부 프리랜서로 계약해 왔으니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 **(사회보험 자진신고)** 여건이 되지 않아, 또는 잘 알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추진

\*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 고용보험 소득기반 전환\*과 함께 미신고 사업장 대상 안내문 발송 등 자진 신고기간 홍보 병행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에서 '월 보수'로 변경 →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여 개인별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 **(사업장 점검)** 고의적인 ‘가짜 3.3’ 계약\*이 의심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점검 진행

### 가짜 3.3 계약

-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 음식숙박, 도소매, 물류택배업 중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중심으로 108개소 감독 실시(‘25.12.1~‘26.3.5)

- 음식·도소매·서비스·조선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업종 중심으로 의심 사업장 샘플링\*, 감독 실시(‘26.下) + 유관기관\*\* 협업 통해 사례교육 추진

\* 현장제보 및 신고, 국세청 소득자료 분석, 채용공고 모니터링 등 활용

\*\*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 및 지역 내 업종별 협단체 등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오래 몸담아 왔지만,  
작은 가게와 사업장을 꾸려가는 일이  
결코 노동 못지않게 고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매출은 마음 같지 않고, 사람을 한 명 더 쓰는 결정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술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나 가짜 3.3 같은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을 지키는 일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멀리 보면 사업장의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사업장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급변하는데 노동법은 복잡하고,  
법을 지키고 싶어도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막막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담이 있다면,  
그 짐은 정부가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작은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AI상담, 찾아가는 컨설팅, 취약사업장 맞춤형 교육 등  
상담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AI 노동법상담」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을 탑재하여,  
하반기부터 더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주 분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  
그 상생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을 지키려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지,  
관행을 바꾸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실질적인 힘이 될지  
가감 없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듣고, 결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